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발표 순서



추진 현황



향후 추진 전략



추진 현황

추진 경과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14.9.19)

‘노사정 대타협’ ('15.9.15)

- 주요내용
- | | | |
|---------------|---------------|-------------|
| ① 청년고용 활성화 | ② 원하청 상생협력 | ③ 비정규직 고용개선 |
| ④ 사회안전망 확충 | ⑤ 임금체계 개편 | ⑥ 장시간 근로개선 |
| ⑦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 ⑧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 |

노동개혁 5개 법률안 국회 제출 ('15.9.16)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 제안 ('16.1.13)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마련·시행 ('16.1.22)

주요 추진 내용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단축(68시간 → 52시간): 단계적 시행
-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중장년일자리법 (파견법)

-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 파견 허용
-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법)

- 제한적 기간연장 허용 (2년+2년)
- 추가 2년 이직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확대
 - 실직전 평균임금 50% → 60%, 90~240일 → 120~270일
-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의 90% → 80%

산재보험법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2대 행정지침

- 공정인사 지침: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 취업규칙 지침: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 개정절차

추진 효과

근로시간 단축	15만개
임금피크제	13만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9만개

37만개
고용창출 효과

통상임금 명확화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 국민의 61.7%가 취업규칙지침,
48.3%가 공정인사지침을 지지 (여론조사, '16.2.19)

고용·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향후 추진 전략

추진 전략 [1]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조속 완료

■ 빠른 시일내 노동개혁 5법 완료

- 노사정 복귀 설득과 동시에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완료

■ 2대 지침 현장착근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 노동개혁 진행

공정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2대지침 기업현장 착근 추진
 - 노사단체 전문가 컨설팅, 평가모형 개발, 우수기업 발굴 확산
-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확산,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및 장시간 근로 개선

노동시장 이종구조 개선

-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제고방안 추진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효적 보호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의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 강화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전략 [2]

노동개혁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청년·비정규직 등
과소대표 계층의
이해관계 반영 필요

합의 도출
방식의 전환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공론화 협의강화

- 합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 중앙단위의 노사정 협의 뿐만 아니라, 개별 현장 중심의 개선 확산

이미 개별기업에서는 노사의 자체적인 제도개혁이 확산되고 있음

A사 (금융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규정 도입

B사 (공기업) 근속에 따른 자동승진제 폐지

C사 (자동차) 생산라인 근로자 전환배치 적극 수용

D사 (전자) 노조가 협력사와 임금공유제 제안

추진 전략 [3]

추가 개혁 추진

■ 지금까지의 노동개혁을 토대로 이중구조와 낡은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 아젠다 추진

1

고용보호법제 개선

- ① 행정지침의 시행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부작용 보완
- ② 비정규직 고용형태간 보호수준 재조정

2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 ① 미조직 부문의 근로자 대표성 강화
- ② 균등 교섭력 확립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3

사회안전망 강화

- ① 경험요율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실업급여 도입 검토
- ②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실업보험 저축구좌제*

* 개인저축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실업 시 인출 및 대출 지원

추진 전략 [4]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

■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상호 보완적 기능

- 교육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노동시장과 교육

- 청년실업
 -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 기혼 여성 고용 부진
 - 취학자녀로 인한 경력단절
- 이중구조
 -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임금 요구 및 고용불안에 대한 저항

교육개혁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친화적 교육개혁 추진 필요

감 사 합 니 다